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 209 회

제 2 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 가. 이영옥 의원(일괄질문)
 - 나. 최진동 의원(일괄질문)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1. 시정질문의 건
 - 다. 김중천 의원(일괄질문)
 - 라. 한근수 의원(일괄질문)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 가. 이영옥 의원(일괄질문)..... 2면
 - 나. 최진동 의원(일괄질문)..... 6면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11면
1. 시정질문의 건
 - 다. 김중천 의원(일괄질문).....17면
 - 라. 한근수 의원(일괄질문).....23면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28면
 - 보충질문(한근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36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41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42면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계속되는 장마철 무더위로 인하여 활동이 불편함에도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질문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대전 점자도서관 회원님,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회원님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경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실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가. 이영옥 의원(일괄질문)

(10시 06분)

○의장 박영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오전에 이영옥 의원님과 최진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김종천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차임벨이 2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이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 발전과 대전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대전시민 중에 본 의원과 같은 시각장애인은 약 8,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점자도서관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점자책은 물론 녹음도서와 전자도서 등을 제작하고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자도서관이 필요한 시민들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장애인은 물론, 읽기에 장애를 가진 노인, 저시력인, 학습 장애인, 양손절단 장애인이나 사지마비 장애인 등 일명 독서 장애인까지로 본다면 점자도서관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 점자도서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독서 장애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이 공간은 동구 삼성동의 복잡한 인쇄소 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점자도서관을 찾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택시기사 중에도 이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인근 파출소의 경찰관들조차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비장애인들도 이럴 정도인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도서관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전 점자도서관의 운영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시 09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14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시장님!

대전 점자도서관의 현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애인 복지수준,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대전시 장애인 지원정책의 현실이 바로 이것인가?’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닌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개척해 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나 알 권리, 평생학습권 등을 충족시킬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국가기관이 장기간 외면하고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조금씩 인식이 나아져 지난 1987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에는 장애인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07년에 발효된 새 「도서관법」은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2012년 개정 「도서관법」은 “도서관은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은 물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이 설치되긴 했으나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아직까지 전체 공공도서관의 10%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점자도서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관심 밖으로 방치돼 왔습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지식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대전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안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시장께 제안합니다.

신축되는 공공도서관이나 기존의 공공도서관 내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공간을 마련해 점자도서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이와 함께 점자도서관을 마련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공도서관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찾기 쉬울 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자도서관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의 주차장과 외부 휴게공간, 구내매점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의 편의성도 좋아집니다.

공공도서관은 홍보효과도 좋아서 점자도서관 운영자는 잠재적 이용자를 발굴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장애인 이용자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공공도서관의 풍부한 자료를 대체자료 제작에 이용할 수 있어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도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다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점자도서 제작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문제와 늘어나는 자료를 비치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외되었던 장애인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설치된 점자도서관은 기존의 운영주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

니다.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관들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순환보직이 일상화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일은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점자도서관에는 점역사와 교정사, 음성도서 제작사, 보조기기 수리기사, 특수자료 관리사서,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채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본 의원과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점자도서관 현장 운영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본 의원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만 의존해 오던 점자도서관 서비스에 공공의 힘을 보태려는 의지만 있다면 신규 투자로 인한 부담이나 시행착오 없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이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점자도서관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25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부산시는 2002년에 점자도서관 건립예산 6억 원을 복권기금에서 확보했고, 구립 사상도서관 신축 당시 도서관 1층을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으로 설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사례를 비추어 본 의원은 대전 점자도서관을 대전의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 별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현재 공실상태인 한밭도서관 별관은 얼마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일환으로 대전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안으로 이전·설치하기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제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첫 출발

을 위해 대전 점자도서관을 한밭도서관 별관으로 옮기는 일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신뢰와 소통,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염홍철 시장님의 의지를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누가 좋은 일을 했는지?

누가 역사의 흐름을 반대했는지?

역사는 말해줍니다.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현명하신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이영옥 의원 시정질문서
.....

○의장 박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진동 의원(일괄질문)

(10시 28분)

○최진동 의원 교육의원 최진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50만 대전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전교육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인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기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 송구합니다.

첫째, 대전과학영재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문제, 둘째,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과학영재학교의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신호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도전해온 과학영재학교 유치노력이 염홍철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시의원의 숨은 노력 그리고 150만 시민의 염원이 한데 모여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강원·충청권의 과학영재학교로 교육부로부터 지정된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점과 연계할 수 있고, 우리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 및 KAIST 등과 유기적 체제를 갖추으로써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일반계 동신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을 승인받아 2014년 3월 대전과학영재학교와 가칭 제1과학고 동시 개교를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과학인재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기본계획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 대전과학고등학교는 2014년 3월 1일자로 학년당 6학급 규모의 대전과학영재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99명 선발에 전국에서 2,055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입학 경쟁률 20.7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경쟁률 15.4 대 1에 훨씬 웃도는 수치로 새로 개교하는 대전과학영재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는 1단계 1차 합격자 발표, 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검사, 3단계 인성면접·과학영재 캠프를 거쳐 7월 19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전과학영재학교는 우수한 과학인재의 요람으로 많은 기대 속에 개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의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신축, 성두관과 기숙사 A동 증축 및 개·보수, 다산관과 식당·체육관동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대전시와 시 교육청 간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을 통해 과학영재학교의 재정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약속은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 승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 6월에는 시와 교육청 간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전환추진에 소요되는 총예산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있었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은 과학영재학교 전환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운영비 총액의 50%를 연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고 시설비 총액의 50%를 4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총 시설비 지원 예정액 82억 원 중 2013년 지원 예정이었던 40억 원은 어찌되었는지 본예산에 10억 원만 계상되었고, 이후 1회 추경예산에는 일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 대전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 시설비 비법정전출금 40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10억 원을 제외한 30억 원에 대해 연내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교육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대전과학영재학교 운영을 위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자체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2014년 3월 설립에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프리젠테이션 설명개시)

입시부정이 불거진 서울의 모 국제중학교 사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국제중 폐지 법률안까지 발의되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추진경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순서는 국제중·고 설립 추진배경, 설립 및 운영계획, 선발전형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살펴본 후 교육감께 관련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지정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인문·사회 통합형 중·고등학교의 부재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타시·도로 유출되고 있고, 세종시 출범 및 신동·둔곡지구 첨단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마련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제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설립의 근거로는 「교육기본법」 제19조 영재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국내에 국제중학교는 대원·영훈·청심·부산국제중 등 4개교가 있고, 국제고등학교는 부산·서울·인천·동탄·고양·청심·세종국제고 등 7개교가 있는데, 2015년 3월 대전과 울산에 국제중·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타시·도와 달리 대전국제중·고등학교는 공립으로 하되, 중·고 병설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당시 예정학교 부지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로 국제중학교는 12학급에 학생 300명, 국제고등학교는 18학급에 학생 450명 규모로 설립예산은 각각 235억 원과 3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 구입비와 국제고 정원의 40%인 180명의 기숙사 예산을 포함한 소요예산 추정치는 총 60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체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정원 내 100명, 정원 외 30명을 합한 130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회적배려대상자 20명, 외국인학생 2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내 전형은 일반전형과 귀국자로 분류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이루어집니다.

정원 외 전형은 국가유공자 전형, 특례 전형, 외국인학생으로 이루어지는데 첨단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외국인학생 전형이 눈에 띕니다.

대전국제고등학교는 국제고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형별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은 국제중학교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2015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정원 내 150명, 정원 외 38명을 합한 18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국제중의 경우 국제이해 및 외국어를 특성화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국제고는 국내진학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정 I 과정과 해외대학 진학 희망자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과정 II를 개설·운영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와 같이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추진 경과와 추진과제 등에 대해 몇 가지 교육감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시점에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재정적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으로 국제중·고 설립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불거진 국제중 비리사건 등과 관련하여 선발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발유형이 자기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비경제적·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방식으로 인해 부유층 자녀의 특혜 입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의 우수 사례와 타시·도 자료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중·고등학교 수업료가 일반학교 수준이라 하여도 국제중·고의 특성상 국제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부모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교육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공무 국외활동으로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말레이시아 페어뷰국제학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특성상 국외 체험활동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도 교육과정 편성에 이러한 점이 예상되는데,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 외에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확인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11년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했던 사안으로 염홍철 시장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본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에 매입하여 이미 설립된 23개교에 대한 408여억 원이 미전출되고 있음을 질문드리고 전출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미전출금 408억 원에 대해 도안·학하지구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부담이 경감되는 시점인 2014년부터 10년간 연차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대전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대전시와 교육청 간 협의가 있었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분할 전출하기로 한 협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6월 대전시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억 원, 2015년 20억 원, 2016년 30억 원, 2017년 42억 원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51억 원씩 연차별 전출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10년간 연차별로 전출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을 본 의원은 10년간 균등한 금액으로 전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연차별 금액차이가 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본예산에 전출금 반영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10년간 연차별 전출계획을 그보다 단축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육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한 대전과학영재학교, 대전국제중·고등학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학중심도시 대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에 초석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최진동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박영교 최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의장 박영교 그러면 이영옥 의원님과 최진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까.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이영옥 의원님께서서는 본인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 점자도서관을 한밭도서관 별관으로 이전해 달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 점자도서관 활용 관계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밭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영옥 의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절차상 시각장애인들의 희망사항인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한밭도서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전 점자도서관의 위치는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한밭도서관 내에는 시각장애인실이 운영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불편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발도서관으로 점차도서관을 이전해야 된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받들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께서 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문제 또 미전출금 408억 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10년간 연차별 전출계획을 단축할 수 있는냐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당초 2013년도, 즉 금년이지요, 본예산 편성 시 과학영재학교 지원비 40억 원 중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심의결과 10억 원만 본예산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억 원을 1회 추경에 담아야 하는데 이번 1회 추경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지 못하고 가능한 대로 정리추경에 30억 원을 담아서 금년 내에 계획했던 40억 원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1년에 14억 원씩 배정돼서 총 82억 원이 원래대로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균등하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지원액수가 적고 뒤로 갈수록 많아졌다는 취지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번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08억 원인데 이와 별도로 2007년도 이후의 도안·학하지구 개발과 관련한 학교용지부담금 256억 원이 별도로 교육청을 통해서 LH공사와 대전도시공사에 정기적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까지 전출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408억 원 말고도 256억 원이 더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분담액수가 적고 2018년부터는 연 51억 원씩 2023년까지 10년 동안 균등 전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년을 조금 줄일 수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계획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줄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오늘 현재 10년 연차별 전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256억 원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전액 전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박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가슴 속에 잠재된 거인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꿈을 통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신장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노력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창조적 프로젝트인 ‘나를 돌아보는 힐링열차’ 운영은 전국적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고,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한 학생오케스트라사업 역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키워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의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귀중한 질문을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의원님께서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특별히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대전과학영재학교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지자체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2014년 3월 개교는 차질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충청·강원권의 대표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지정됨으로써 우리 대전은 교육과학기술의 도시답게 그 위상과 면모를 명실상부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는 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일반 학생,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을 뺀 일반 학생만 22.2 대 1이라는 전국 최고의 지원율을 보임으로써 전국적인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전체 응모학생 중 서울에서 29.4%를 차지했고 경기도에서 33.5%를 차지해서 수도권에서만 전체 응모학생의 62.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전·충남·세종·강원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수도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전과학영재학교와 대전광역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대전과학영재학교는 2014년 3월 1일 개교하며, 학년당 6학급, 학급당 정원 15명 규모로 전국 단위로 모집해서 학년당 모집인원 9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 총 학생수는 270명이 되겠습니다.

교원도 전국 공모를 통해서 박사급 전임교사와 겸임교수, 비전임교수 등 우수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되 무학년제, 졸업이수학점제, 리

더십활동시간 하한제, 연구탐구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학기제와 계절제의 복합운영, AP·PT제도, 학문적대부제도, 다양한 인증제도, 융합교육과 그린에너지 특성화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서 다른 과학영재학교들과 확실하게 차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면에서 대전과학영재학교는 기존의 본관동, 첨단과학동, 기숙사, 식당, 체육관 등을 개보수하도록 하고, 특별교실동과 지하주차장 등은 증축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교실은 특별교과교실, 토론수업교실, 최고급 어학시설을 갖춘 영어학습실, 맞춤형 교과교실 등을 증축하게 되고 교실 14개 규모의 미래지향적 첨단도서관을 구축함으로써 영재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장님께서 지자체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설립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관 및 기숙사 수선이 내년 2월까지는 확실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2014년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겠으나 특별교실동 증축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조속한 지원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은 전에 대전과학영재학교 지원을 위해서 시청에서 올린 지원금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삭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첫 번째, 대전국제중·고 설립 재정보조 계획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두 번째, 선발전형 및 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방안은 무엇이고 세 번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안은 무엇이나, 네 번째로는 국외체험활동을 위한 수익자 경비부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우리 지역의 인문사회계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과 귀국자 자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현 교육부로부터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지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재정적 문제는 없는지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이 국제중·고 설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는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교육부에 학교시설교부금과 결산 결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설계부터 시공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비용이 일시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정적 문제는 시간을 두고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잘 계획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이 국제중·고 설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또 기초 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설립하게 될 수 있는 등 많은 변수가 있어서 2015년 설립예정인 대전국제중·고등학교의 벨트 내 설립과 그 시기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따라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부지 및 개교시기 변경 등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아마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에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제중학교 선발전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제중 선발전형은 학교별 추천인원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선발정원의 2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 심층면접을 실시하는데 2단계 심층면접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위원이 다수 포함된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해소해 드릴 생각이구요, 사회통합전형에서는 부유층 자녀의 특례입학사례가 부당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정하는 자격과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선발전형은 1단계에서 중 2학년과 중 3학년 영어내신점수 마이너스 출결점수로 모집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 심층면접을 실시할 것인데 2단계 심층면접과 사회통합전형은 중학교의 전형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사립국제중학교의 선발전형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신 바가 있는데 대전국제중·고등학교는 공립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비리발생의 소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외국의 우수사례와 타시·도 자료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에 특색있고 우수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 외국의 우수사례 및 타시·도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에 국내 국제중·고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저희들이 고안한 것은 일반화시키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도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국제중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일부 교과에 영어몰입교육과 다양한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대전국제중학교와 고등학교 공히 호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호주 및 아시아 국가 간 비디오컨퍼런스사업의 일환으로 화상수업 교류를 추진하고 외국인 지원현황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국제인증도 받아내는 등 우수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서 최진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걱정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국제중·고의 국외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수익자경비부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셨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의 특성상 국외체험활동경비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자경비 부담은 적어도 일반학교 수준 정도로 책정해서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되 사회적배려대상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배려대상학생들의 국외체험활동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의 기관 등으로부터도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릴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인근 세종시에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돼서 대전지역의 인재유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정말 훌륭한 국제중·고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돼서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영옥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최진동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진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다. **김종천 의원(일괄질문)**

○의장 **곽영교**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서구 제5선거구 민주당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153만 대전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줄 음폐수 처리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모색 그리고 현직교사 불법과외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지적하고, 진로변경전입학제의 추진경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이 그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기는데 보탬이 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안신도시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일명 “클린넷 시스템”이 지난 2012년 4월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쓰레기 집하장 3곳과 수송관로, 투입구 465개 등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설비라고 대대적인 시정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대전시와 자치구 그리고 도시공사 간에 운영주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운영주체를 두고 시와 자치구 실무진이 지난 수개월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이 유발되었을까라는 의문을 시민들께서는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안신도시 클린넷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시설의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이유가 명확해 짐을 알 수 있습니다.

관교, 파주, 아산, 김포 등에서 본 시설을 운영해본 결과 각종 악취 및 소음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 불만도는 높아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청소차 수거방식에 비해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기도 하였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패사례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에서 무조건 성공한 시설이라는 말에 일단 사업을 추진해 놓고 본 결과이며 이는 우리 대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인 관교시의 기술진단 용역자료에 의하면 클린넷 운영시 음식물쓰레기의 이송 효율이 30% 가까이 떨어지며, 51%의 음식물쓰레기가 배관에 붙어 있다가 생활쓰레기가 혼입되면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었고 소각장 반입쓰레기의 함수율이 설계 기준치인 45% 보다 높은 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관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기술진단을 의뢰해본 결과 시설보완을 위해 200여억 원을 더 투자해야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산고 끝에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합의를 이뤄 내달부터 유성구와 서구에서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타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향후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매년 추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타자치구와의 시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크나큰 갈등 요인입니다.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시설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타자치구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1980~1990년대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복도 통로 중간에 쓰레기투입구가 있어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어 낙하시켜 집하시키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로 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아무리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클린넷 시스템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국내에서 성공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향후 파생되는 행정적 부담을 미루어 판단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폐수 하수 연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고자 2011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3년 읍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기준 1일 476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100여 톤이 퇴비로 재활용되고 하루 360톤의 읍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읍폐수 처리문제는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니라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읍폐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육상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육상처리는 “미봉책”일 뿐이지 읍폐수 처리 대책이 될 수 없고 위험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까지 자원순환단지 내에 읍폐수 에너지화시설을 조성하여 원활한 읍폐수 처리가 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처리계획 및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전하수처리장에서 동절기에 60톤의 읍폐수를 처리해 왔고, 미생물의 활성화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읍폐수 발생량의 최대 52%인 190톤까지 단계적으로 처리용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 읍폐수 육상처리가 한고비 넘긴 것 같지만 실제로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읍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은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읍폐수의 성상을 살펴보면 BOD가 5만~15만ppm, 총인의 경우 289ppm, 총질소는 1,736ppm 정도로 유입량에 비해 총인과 총질소의 농도가 매우 높고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의 오염물질처리 설계기준이 BOD 176.1ppm, 총인 5.3ppm, 총질소가 41.6ppm임을 감안하면 설계기준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고농도의 읍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겠다는 대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칫 읍폐수를 처리하려다가 기존 저농도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 계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계처리 방식으로는 읍폐수를 균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발생 읍폐수를 공공처리 시설에서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민간처리시설에 의존함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입찰 때마다 민간처리업자의 처리비용인상 요구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그때마다 쓰레기 대란과 민원발생 우려로 민간처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음폐수의 오염도에 대한 정밀한 유입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음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의 BOD, 총인, 총질소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들이 기존 하수처리 체계에 악영향을 미쳐 하수처리 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하수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처리 대책은 마련해 놓았는지와 그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적체되거나 수거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해법이 빨리 나오지 않는 한 153만 대전시민의 불편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갑천 A구역의 총인 목표수질 및 삭감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2013년 9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인 갑천 A에도 총인이 관리대상물질로 추가되어 환경부에서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인에 대한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우리 시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총인 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계획기간 내에 삭감량에 상응하는 개발할당량을 부여받아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수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느냐의 양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 과학단지, 택지개발, 도안신도시 호수공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전시에서 확보한 개발할당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당량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대전하수처리장과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이어서 추가적인 총인 삭감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가동 중인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목표수질도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커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계획기간 동안 대전광역시의 개발할당량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계획기간 내 우리 시

의 총인사감계획과 개발할당량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불법과외 재발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기관평가 2년 연속 종합 1위에 빛나는 대전시 교육청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교육청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중순 현직교사 불법과외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전의 A사립고등학교 B교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3학년 세 학생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자신의 집에서 불법과외 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특별반 학생들을 위해 외부강사까지 초청해 고액 과외수업까지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교 측이 관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B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서둘러 B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의 관련 법률상으로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현직 교사의 소명은 영리를 취하지 않고 참스승의 길을 걷게 하자는 사회적 징표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열이 유달리 높은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 개인만의 부도덕한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교원의 총체적인 복무관리를 맡고 있는 교육당국의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건으로 지난달 시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감사결과와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변경전입학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로변경전입학제란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계열변경 전입학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해 연 1회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에서 특성화고·방송통신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방송통신고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업의 중단없이 학적을 옮기는 제도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줌으로써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단을 제로화하겠다는 교육청의 확고한 방침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진로변경전입학제가 당초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3년 전입학을 희망한 학생들의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고2 학생들의 경우 특성화고에서 전학을 희망한 학생은 고작 1명이었고,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희망한 학생은 100명 선에 달했습니다.

고1 학생들의 경우에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6명, 특성화고에서 방통고로 2명,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214명 등 총 222명의 신청학생 중 대부분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 신청이 대부분이어서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는 무색해지고 진로변경전입학제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학습부진학생을 강제로 밀어내기 위한 꼼수라는 오명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진로변경전입학을 시행할 경우 전문교과 미이수 문제 등이 발생해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진로변경전입학제와 관련하여 시행 첫해의 추진 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염홍철 시장과 김신호 교육감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시된 지적과 대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김종천 의원 시정질문서
.....

○의장 **곽영교**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한근수 의원(일괄질문)

(14시 22분)

○한근수 의원 새누리당 소속 유성구 제4선거구 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늘 수고하시는 염홍철 시장님, 대전교육 발전에 온 힘을 쏟아주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공무에 열심이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2016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이 중요한 당면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리라 믿으며 염홍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폐기물처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유기성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고동 매립장 부지에 2015년까지 RDF 즉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RDF 전용보일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그리고 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을 포함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07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 1일 처리용량이 90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단지 내에 들어서는 시설들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에 대한 부정적 요인과 사업추진방식 그리고 일방통행식 사업진행으로 인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상당수 지적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고민해 보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은 도심 생활폐기물을 RDF로 고형연료화하여 전용보일러 시설의 연료로 사용,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납품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일견 폐기물을 에너

지로 활용하는 완벽한 자원순환의 시나리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기술적 결함과 운영비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8회 정례회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지자체를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통한 현황분석 후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단지의 시설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성공의 열쇠인 정확한 통계자료로 본 사업이 설계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RDF 제조시설이 비성형 고품제품 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함수율, 발열량 등 발생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성상 예측과 생산된 RDF의 수량과 품질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보고서에 제시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평균함수율과 저위발열량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민간제안 내용대로 RDF제조시설이 설계된다면, 이 사업은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이 반입되면 분리·선별 공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건조공정의 과부하로 인해 당초 설계보다 실제 RDF 생산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조공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력비와 연료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시행착오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 환경부에서 선정한 4개 시범사업 중 사업자체를 포기한 강릉을 제외한 수도권 매립지, 이것은 서울을 말합니다.

부천 및 부안 등 3개의 시범사업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시행착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범사업에서 높은 함수율, 그로 인한 흡착현상이 발생하였고, 선별불량으로 인한 가연물의 함수율이 증대되고 건조기에 과부하가 걸려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건조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외부연료 투입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비가 상승되었고 이는 과중한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더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LNG 경유 등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이 자원순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우리 시의 경우 발열량이 4,154kcal의 RDF를 생산하겠다는 건조과정에서 약 800kcal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32.25%의 높은 평균 함유율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에너지 투입량의 증가는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환경성 및 경제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유 및 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이는 본 사업의 취지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부합되지 않아 대안제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건조하수슬러지가 보조연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의 의문입니다.

우리 시 대전하수처리장에서는 소화조를 통해 유기물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의 자체 열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건조하수슬러지의 법적 연료기준은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동안의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 변경과정에서 사업규모 조정이 얼마나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되었는지를 지적하였습니다.

2009년 당시 집행기관은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까지 심의한 자원순환단지 사업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갑자기 BTO 방식을 채택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도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민자추진은 타지자체의 사례에서 봐 왔듯이 곧바로 사업실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드시 민자로 추진해야만 한다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고시 민자방법”이 그래도 용인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안했었습니다.

다섯째,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소통 및 사회적 합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불안정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에도 시의회 설명 및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방식과 공사비, 운영비 및 처리용량 등 사업내용이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주민설명회 및 기술관련 토론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것이 현재 대전시의 모습입니다.

사업초기부터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문제제기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합한 기술검토와 사업추진방식 등 대책수립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말로 의회와 시민을 안심시킨 후에 뒤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원순환단지 사업의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가 제3자 공고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 검토해줄 것을 대안제시 겸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순환단지가 들어서는 금고동 매립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상 부지와 짧게는 400여 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의 세밀한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자칫 우리 시의 숙원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기술적 결함과 운영비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원순환단지는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시가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재정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면 기술적 결함을 우리 시의 큰 인프라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지역대학의 최첨단 환경기술의 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고, 연구개발 용역 등을 통해 처리기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도 클 뿐더러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지적소유권 등은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되어 활용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굳이 민간기술을 활용해야 하겠다 이런 고집과 마음을 끝까지 갖는다면 현재 제3자 공고방식 이외에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개발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의 도입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RDF 제조시설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대기오염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의 주성분으로 이를 많이 들이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환경보전법」상 RDF 제조시설은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통제할 기준이 없습니다.

원주시와 부천시에 설치된 RDF 제조시설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유사시설인 소각시설의 배출허용치보다 약 2.6에서 11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법적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지역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향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및 도안신도시 클린넷 시스템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기존 대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용량 등을 정확히 설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넷째, 물리적 재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최소한의 화석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쇄·건조·압축성형 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시범사업에서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설을 설계함으로써 분리·선별공정의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산율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로 적절한 기술, 설계 등 시설 전반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답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째, 운영비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공법 또는 업체 선정 시 운영비 항목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경우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법 평가를 허술하게 해 이미 시설 준공을 한 14개 지자체에서 애초 약속된 운영비보다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배 넘게 더 들어 예산낭비가 벌어졌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검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고 사회적 합의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대전시의 변방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중심이 된 이 지역에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환경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

절차에만 얽매이지 말고 원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이 될 것인지 충분한 검토 후 금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본 의원이 언급한 여섯 가지의 우선 검토 내용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한근수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의장 **곽영교** 그러면 김종천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까.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김종천 의원님과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집하시설 자원순환단지조성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또 많은 특허와 기술이 난무하고 있는데 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여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상당히 부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답변이 얼마만큼 확실한지 의문을 제가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도 도안신도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운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가동중단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금년부터 시작되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방안 등에 대한 시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셔서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동집하시설 운영 주체를 두고 시와 자치구 간에 왜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보고를 받아보고 언론을 보면 시·구 의견이 좀 달라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설은 기존 쓰레기 수거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시설이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므로 자치구에서 시에 특별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운영비 지원 방식에서 시와 구가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는 교부금으로, 자치구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달라 상호간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소되고 지금까지는 교부금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자동집하시설은 이미 시행 중인 판교 등 신도시의 경우 기존 수거방식보다 효율성이 낮고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간다는 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또 제가 보고 받기로는 판교, 김포 등 그 이전에 설치된 지역에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보완한 최신 시설로 설계시공되어 우리가 설계시공한 시설은 과거 판교나 김포의 시행착오랄까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거방식의 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친환경 설비로서 효율성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앞으로 국내외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하시설 운영 자치구와 타자치구의 시비 보조금 지원 관련 형평성에 대한 해결 방안,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개선된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자동집하시설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서 현 상태에서 가동 중단할 의지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시설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고 또 성능검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4월 도안신도시인 유성지역부터 일반쓰레기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7월 1일부터는 유성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또 7월 중순부터는 서구지역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정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전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음폐수에 대한 정밀한 유입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 발생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금지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2011년 10월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시행 전 1일 486톤에서 시행 후 439톤으로 49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 1개소와 민간처리시설 3개소에

서 퇴비화와 사료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과정에서 약 60%의 음폐수가 발생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현재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완공이 2015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전까지, 우선 금년부터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폐수에 대한 반입기준을 2012년 12월에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하수처리장의 반입 방류수 수질기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폐수에는 고농도의 BOD 또 총인, 총질소 및 음폐수의 난분해성 유기화합물로 인해서 기존 하수처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쳐 하수처리 대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하수 연계 처리 시 방류수 수질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농도의 음폐수는 수처리 계통이 아닌 오폐수 처리 계통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반입되는 음폐수는 소화조에 투입하여 상당 부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상등수만 수처리 계통으로 처리하고 수처리 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음폐수가 고농도이나 유입되는 하수량에 비하여 미미한 양으로 인해 오염부하량은 총질소의 경우 전체 부하량의 0.9% 정도입니다.

BOD와 총인은 혐기성 소화와 약품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총인의 경우 2011년 6월에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폐수로 인해 하수처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음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에 따라 미생물 활동이 둔화되는 동절기의 경우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한 후 하수처리장 수질 여건이 개선된 후에 연계처리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처리가 가능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신일동 소각장에서 일정량을 소각처리하여 음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량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 400톤 규모의 음식물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을 2015년까지 완공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기간에 우리 시 개발할당량 확보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 환경부에서는 금강수계의 목표수질 설

정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2013년 10월경에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3단계의 경우 그동안 관리되어 오던 BOD 항목 외에 금강 하류지역의 총인 항목 추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미 총인 삭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이 이번 목표수질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갑천 A유역의 총인 목표수질 강화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장의 목표수질 강화, 하수의 하천 유입 방지 저류조 설치, 하수처리 구역 확대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계획 중인 제3단계 기본계획에 우리 시 현안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개발할당량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의원님께서서는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나 급할수록 타시·도 문제점을 감안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성공적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정사업이나 제3섹터 방식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고 이것은 뭐 거의 3년 전, 2년 반 전 한근수 의원님께서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도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민자사업 또 재정사업, 제3섹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가 우월한 장점만 가지고 있고 어느 방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취임을 2010년 7월에 했는데 민간제안을 접수하고 6월에 KDI에 제안서 타당성 검토의뢰가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논의라면 저의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KDI에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고 피맥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민자적격성 등을 심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대전시가 아니라 KDI 피맥의 검토결과에 의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과정을 거쳐서 금년 2월에 피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 시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 단계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에서 결격이 있다고 판정하면 이 사업이 바뀔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의지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들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절차 이행 중이니까 그 절차 이행에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의 결정만이 유효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이것을 전환한다든지 제3섹터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최종사업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근수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3섹터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비지원과 민간투자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3섹터 방식에 가까운 사업이다 해도 큰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환경 관련사업을 민간투자자로 유도해서 현재 부산, 대구, 포항에서 자원순환단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걸 보고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봐야 되고 만일 심의가 통과되면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과 함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첫째가 폐기물 고형연료화 RDF조, 제조시설 가동 시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는데 대기오염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나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시설이 설치되는 금고동 매립장에도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아황산가스, 오존 등에 대한 환경영향저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각종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처리를 위한 집진설비를 최첨단시설로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상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적인 대기오염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및 도안신도시 클린넷 시스템 등 폐기물 발생량

을 최소화하는 기존 대책과의 조화를 고려한 RDF 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용량 산정에 대한 설계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은 1일 1,519톤이 발생하고 이중 재활용이 978톤 약 65%입니다.

소각이 278톤, 매립이 26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의 시행 이후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기물 고형연료화 즉 RDF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KDI 피택에 의뢰하여 쓰레기 발생량 예측과 처리에 대한 효율성, BC분석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았으며 또한 환경부 지침에 의거 설치된 환경부 최저가사업추진단으로부터 우리 시의 시설용량이 적정한지를 검토 받은 결과 시설용량 즉 400톤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시 경유 및 LNG 등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석연료는 비상시 외에는 사용계획이 없으며 대부분 전용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자체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소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시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여로 기술 설계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논의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민간제안사업은 제3자 제안공모를 위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방안 및 공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의 증가는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함으로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될 수 있는 근거마련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적정한 비용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3자 제안공고 시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항목에 관련 항목의 배점기준을 높였으며 제안사업은 BTO 즉, 건설이 전운영 방식으로 15년간 운영 후에 우리 시가 운영하게 되며 일정수입 확보를 위한 최소 운영 수입보전은 없으므로 운영비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상 과정에서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김종천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렸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지금 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끝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원님, 우리 학생들과 대전교육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직교사 불법과외 특별감사 수감결과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교육공동체 모두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현직교사의 불법적인 개인과외 교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해당학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2013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현직교사가 3학년 재학생 3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개인과외 교습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학교에서는 유명한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내에서 일부 성적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수학과목 특별교습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엄정한 감사결과 불법사유가 분명히 드러났음에 따라서 불법과외교사 및 외부강사를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법인에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현직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의해서 개인과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번 불법과외 사례를 적발한 즉시 ‘복무관리 철저’ 공문을 각급 학교에 2013년 6월 14일 발송하였고 지난 6월 27일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소집하여 불법과외 근절 및 교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공직자로서의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감찰 기능을 확대해서 학교 내 불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복무규정 위반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진로변경전입학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진로변경전입학제 시행의 첫해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로변경전입학제는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선택과 변경의 기회를 확대해 줘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창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첫해 시행결과 고등학교 1, 2학년 총 320명이 전입학 신청을 하였고 그 중에 204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전입학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희망한 학생이 308명인데 그 중에 192명을 배정하고 116명은 미배정했는데 그것은 희망하는 학교의 수용여건이 불충분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경우는 6명이 희망해서 6명 모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 방송고로 전학을 원한 학생은 3명 희망했는데 3명 전원 배정했고요, 특성화고에서 방송고로 전학 희망한 학생은 3명인데 3명 전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희망학생이 320명인데 배정을 204명하고 116명을 수용여건 미비로 인해서 미배정했습니다.

진로변경전입학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결과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이 현재 전년에 비해서 11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시행결과를 보고 받고 이 제도를 획기적 수범정책사례로 선정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반화하도록 권장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던 바 시행상 일부 보완할 부분이 발견되어 이미 개선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할 시 미이수 과목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개의 해당과목을 충남기계공고,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여상 등 8개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개설하고 학생들이 주말 또는 방학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고 간 전입학의 경우에도 약간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전입학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 탄력적 운영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다시는 미이수 과목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진로변경전입학제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전기술정보학교로 전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 2학년 대상 143명을 선발했고 8월 말에는 전입학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입학 후에도 새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진로캠프를 개설하여 연주시키고 있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지속적인 1 대 1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진로변경전입학제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학습부진학생을 밀어내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서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한 바에 의하면 교육자로서 그럴 일을 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선택과 변경의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해서 학교탈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개성이 강하고 호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호불호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입학 당시에 강제 배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진로변경전입학제로 인하여 행복하게 학교를 다시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성화고에 가고 싶어서 선택한 학생들이 많은데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일반계고로 강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본인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최근에는 우수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비가 전월 면제이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직업을 갖고 보수도 훌륭하며 대학 진학의 문호와 해외유학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문호도 상당히 많이 열려있어서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절대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한근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염홍철)

(15시 39분)

○의장 **곽영교** 이상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한근수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근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세밀히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2010년도에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피택에서 정리한 내용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 내용 외에는 사실은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먹는 것은 한 1주일 물만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배설하는 것은 1시간 배설 안 하면 못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 담보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자원순환단지를 민자에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에서 약 2,079억 원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의 비용 중 약 460억 원의 음폐수를 빼놓고 나머지 약 1,700억 정도가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GS가, 어느 특정업체를 본 의원이 지명해서 죄송하지만 대기업에서 이익이 없으면 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민자건 재정사업이건 국비는 똑같습니다.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고 또 만일 광역으로 한다면 금산이나 아니면 저쪽 세종시나 같이 광역으로 한다면 5%, 1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에서 제안한 내용은 우리 대전시에서 재정이 없다, 한 1,000억 정도가 없다고 해서 민자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기업에서는 1,000억 정도를 우리 대전시와 MOU를 체결하는 즉시 은행에서 바로 1,000억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 이외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 원을 받아서 1,700억 정도 되는 중에서 약 70%는 집 짓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500억 이 정도만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한 대기업에서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기술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고 MOU를 맺으면 그 사람들은 기술을 공모를 합니다.

또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대전도시공사와 아마 계약체결을 해서 도시공

사가 여기에 있는 RDF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그쪽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GS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도시공사에 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재정사업을 왜 못하느냐 하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 염홍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이미 6억 원을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재정사업에서 민자로 하겠다고 확 바뀌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시장님께서도 7월에 와 보니까 피맥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행정의 연속성이고 그쪽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염 시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 재정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민자로 해야 되겠다, 재정사업 못 하겠다 하면 방법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대전시의 요인은 뭐냐?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후광효과를 우리 대전시가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논란이 많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왜 IBS가 이쪽으로 옮기느냐는 논란도 결국은 대전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효과들을, 후광효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대전으로 오기 위해서는 금고동매립장을 지냅니다.

금고동매립장 좌측은 1매립장이요, 우측은 2매립장입니다.

매립장 2개 가운데를 지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에 민자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지금 현재 2013년도입니다.

또 행정절차도 지나려고 하면 1, 2년 또 지납니다.

그렇다면 5년 전의 기술 그리고 14개 지자체에서 본 의원이 한 군데라도 성공한 데가 있으면 염홍철 시장님께 ‘제가 잘못 했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14개 지자체에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 이외에 전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는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 처리하는 문제에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걸려 있어요, 이 부분 대기업에서 민자제안한 내용을 민투법에 의해서 제안서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보면 GS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에서 25.4%의 함수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전체에서 평균 함수율은 한 30%, 40% 됩니다.

가동률이 27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대를 놓든지 아니면 1대 반을 놓아야 되는데 1대만 놓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90일은 일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면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1일 300톤씩 쌓입니다, 20톤짜리 15대씩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을 못 하는 고통 때문에 시민의 편리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그 소송에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과 함께, 아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투법에 혹시 문제가 없다면 바꿀 수 있는지, 그렇게 대답을 꼭 해주시고요.

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피택에서 원래는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6월에 피택에 의뢰를 했습니다, 민투가 좋은가 의뢰를 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죄송합니다, 60일이니까 2개월이네요.

2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11개월 만에 통보가 왔는데 BC분석이 부적격 판정이 1 이하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적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민들은 정말 대기업의 편리성 이걸로 볼모를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까 대답을 하신 문제 중에서 만일 ‘그래도 할 수 없이 하겠다, 그냥 민투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친환경으로 해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그런 후광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대전으로 와야 되는데 양쪽에서 냄새나는 곳 없애야 됩니다.

위에다 짓는 것 지하로 들어가든지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순환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은 대단히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고요.

또 환경녹지국장님도 자주 바뀌고 사실 담당과장님도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가 와서 아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심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리라 믿습

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까.

염홍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지금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답변에 다 있었어요.

이 논의가 2010년 4월이었다면 제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니까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려면 절차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밖에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사업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잖아요, BC 또는 민자적격성 이런 검토를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는 아직도 안 끝난 민간사업투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변경이 가능한 거지요.

아까 KDI에서 2011년 5월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은 조정하라 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심의해서 금년 2월에는 적격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결정이 적정하다, 하지 못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만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의회에 이번 질문과 관계없이 저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리면 저도 민간사업보다는 재정사업을 이 경우에는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민간제안접수를 받아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15시 33분)

○의장 **박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을 위원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 56분)

○의장 광영교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 김명경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강영자 의원님, 김동건 의원님, 한영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예결위원회에 선임된 박종선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추후 선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광영교	김인식	임재인	김경시
황경식	김종천	한근수	최진동
남진근	곽수천	안필웅	김경훈
권중순	황웅상	김명경	박종선
이상태	심현영	이희재	오탈진
이영옥	박정현	한영희	김창규
강영자	김동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	-----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경제산업국장	윤탤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자치행정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교통건설국장	이원중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소방본부장	김성연
인재개발원장	이강혁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공보관	김기원
감사관	최두선
정책기획관	신태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상수도사업본부장	황재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신호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